



오라관광단지 자본 검증 다시 ‘도마’

제주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승아 “심의위원회 대신 효력 없는 기구가 검증”
이경용 “법률불소급 원칙 어긋나 법적 분쟁 우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자본 검증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법적 근거가 없는 위원회에 자본 검증을 맡겨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이미 절차를 밟고 있는 개발사업에 바뀐 법을 소급 적용해 법적 분쟁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 등을 상대로 열린 제36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경용 의원(무소속)은 오라관광단지 자본 검증의 절차적 문제를 추궁했다.

이승아 의원은 “조례에 따라 (법적으로 자본 검증 권한을 가진) 개발사업 심의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법적 근거가 없는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또 자본검증위에 개발사업 심의위 위원 5명이 (중복)참여하고 있는 데 왜 굳이 이 위원회를 운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이 의원은 자본검증위가 앞으로 제시할 의견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었다.

이에 대해 양기철 관광국장은 “(자본검증위가 제시하는 의견은) 법적 구속력을 떠나 전문가들의 의견이기 때

문에 (사업시행 승인 과정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준다”면서 “최종적으로는 개발사업 심의위의 심의를 한 번 더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법적 근거를 갖춘 개발사업 심의위에 다시 자본 검증을 맡겨 위법성 논란을 돌파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경용 의원은 “법을 불소급원칙(법의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의 효력을 소급해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아시느냐. 자본검증 과정에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부적합하다고 나오면 사업자가 민사·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례 개정안에 경과 규정을 뒤 도지사로부터 지정 받은 ‘개발사업시행 예정자’ 뿐만 아니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처럼 사업 승인을 위해 사전 절차를 밟는 대규모 개발사업까지 자본검증 대상에 포함시킨 걸 문제 삼은 것이다.

이 개정안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밟던 지난해 7월 입법예고에 돼 올해 2월 시행됐다. 바뀐 법을 소급 적용한 것이다. 법적 근거가 없는 자본검증위 문제를 제쳐두더라도 개정 조례가 법률불소급 원칙에 어긋나 앞으로 법제될 개발사업 심의 절차까지 위법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법을 검토결과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며 “또 개발사업 심의위가 다시 자본검증 절차를 밟더라도 위원회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약식으로 진행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양 국장은 “카지노 신규 허가는 없다는 게 원희룡 지사의 방침인데 드림타워 내 카지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양영식 의원의 질의에 “사실상 시설이 갖춰지기 전 일단 해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포괄적으로 신규허가는 어렵지만 변경허가 신청이 들어온다면 영향평가를 최대한 활용해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답변해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16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 등을 상대로 열린 제주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승아 의원이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개최 철회 촉구

제주도의회, 결의안 제출

제주도의회가 오는 10월 예정된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의회 임상필·이상봉·정민구·홍명환·강철남·현결호 의원 등은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 촉구 결의안’을 16일 제출했다. 이들은 해군이 강정마을 갈등 해소 등을 이유로 관함식 유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오히려 강정마을 공동체를 파괴하고 제주도민 사회 갈등과 혼란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 국제관함식 개최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앞서 해군은 지난 3월 강정마을회에서 국제관함식 설명회를 개최해 갈등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제관함식을 열겠다고 밝혔다. 당시 해군은 마을의 공식적인 반대가 있다면 부산에서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이후 강정마을회는 임시총회를 개최해 주민 의견을 물었으며, 주민들은 11년간 이어져온 갈등과 아픔이 치유되기 전에 이러한 군사적 행사가 추진되는 것은 부적절하며 국제관함식 유치 반대를 결정했다. 주민들은 대규모 군함 정박으로 인한 어장 오염과 국제적인 군함 사열식으로 제주가 군사기지의 섬으로 낙인찍힐 것이라는 우려도 표시했다.

의원들은 제주도의원 일동 명의의 결의안에서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에 따르겠다던 해군은 태도를 바꿔 국제관함식 유치를 강행하고 있다”며 “해군이 당초 제시한 지역주민과의 상생과 화합이 목적이려면 마을의 결정에 동의하고 제주해군기지에서 진행하려는 국제관함식을 철회했어야 마땅하지만 최초의 목적과 다르게 유치 강행에 따라 갈등만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표성준기자

도의회 정책상황실·민원홍보담당관 신설

김경학 “의정지원 체계 강화”

제주도의회가 의장 산하에 정책상황실을 신설하고 민원홍보담당관(4급)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민주당)은 “의회에 제출된 민선 7기 조직개편안에는 ‘도민 중심 의정지원체계 강화’, ‘도정에 대한 건강한 견제와 감시’라는 기조 하에 의회를 정상화시키는 데 중점을 뒤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이 담겨 기대가 크다”며 “앞으로 각 상임위 위원의 의견청취를 바탕으로 행정자치위원회와 분회의에서 그 필요성과 규모의 적정성을 꼼꼼하게 심사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도의회 조직개편안은 ▷민원홍보담당관(4급)과 신설과 미디어담당자 7급 1명 증원 ▷의장(단)의 정책보좌 기능 강화를 위한 의장 산하 ‘정책상황실’ 신설 ▷의회 입법지원 기능 강화 위해

입법담당관(4급) 개방형 임용 ▷의정자료센터(현 정책자료센터)에 임기제(7급) 입법조사사원 3명 증원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상황실은 시간선택임기제 가급 3명(5급 상당)과 나급 2명(6급 상당)을 두고,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정책상황실장을 겸하도록 했다.

특히 그동안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에 시달렸던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도 보강해 상임위원회별로 6급 공무원 1명씩 총 7명을 증원한다. 또한 5조가 넘는 막대한 도정의 예산심사를 지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회 역할과 위상에 걸맞게 현 5급 전문위원을 별정직 4급으로 직급을 상향했다.

이밖에 기록담당(5급)은 행정·속기 직렬로 복수 지정해 의회 특수 직렬인 속기주무관들이 향후 기록관리 등 전문성을 갖춰 우수의회인력으로 승진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

표성준기자

공공주도 풍력자원 개발사업 난망

농수축경제위원회

에너지공사 출자 10% 제한
우호지분 확대 등 대책 주문

제주에너지공사 중심의 공공주도 풍력자원 개발사업이 재원 부족 문제에 부딪쳐 향후 사업 추진에 한계가 예상된다

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16일 속개된 제36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제주에너지공사를 상대로 풍력자원 개발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 9월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풍력의 공공적 관리를 위해 지방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를 사업시행 예정자로 지정해 풍력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11년 5월 제주특별법에 풍력을 공공자원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현재 육·해상 풍력자원 개발지역 선정 및 지구지정은 바람자원에 대한 공개념을 공표하고, 풍력사업에 대해 특례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또한 풍력의 배타적·사적 이용을 제한해 공익 목적으로만 개발을 허용하고, 법령에서 위임된 도지사의 재량으로 풍력발전사업을 허가하고 있다.



고용호 위원장

송영훈 의원

그러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은 지방공기업이 타 법인에 대해 자본 출자할 경우 자기자본금의 10% 이하만을 출자하도록 제한해 자본금이 약 726억원(2015년 기준)인 제주에너지공사의 출자 가능 최대금액은 72억6000만원에 불과하다. 결국 100M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약 6000억원의 10%를 조금 넘는 수준의 자본금으로는 공공주도의 풍력개발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고용호 위원장(민주당)은 “한동·풍력 해상풍력발전지구는 현재로서는 공공주도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주개발공사 등 우호지분인 공기업기관투자자 비율을 전체 지분의 50% 이상으로 늘려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송영훈 의원(민주당)도 “1000억원으로 설정된 에너지공사의 수권자본금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성폭력 수사권 자치경찰 이관 우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국가경찰이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에 대한 수사권을 자치경찰에 이관하려는 계획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국가경찰은 현재 제주자치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56개의 사무를 포함해 모두 184개의 사무를 이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184개 사무 대부분은 생활안전, 교통, 여성, 청소년 관련 사무이며, 가정폭력·성폭력·학교폭력에 관한 수사권 한과 그 이전의 조사권한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김경미 의원(민주당)은 16일 속개된 제36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형사범죄에 대한 사무가 (자치경찰에)넘어와서 우려라고 생각한다”며 “성폭력과 가정폭력은 초동수사가 매우 중요한데 사건이 신고되면 자치경찰이 초기 출동하고 향후 강력범죄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나승권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성폭력·가정폭력 수사권 이관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의 중이지만 우리가



김경미 의원

윤준광 의원

고현수 의원

요청한 것이 아니라 경찰청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그럴려면 수사체계와 지원인력까지 전부 이관돼야 한다고 강력히 얘기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준광 의원(민주당)은 “도민 안전과 직결된 모든 CCTV를 망라하는 통합관제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가경찰의 사무 이관을 위해선 지구대도 만들고, 자치경찰이 소화할 수 있는 부분만 이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고현수 의원(민주당)은 “제주도가 세번째 안전도시로 인증됐지만 생활안전과 범죄 관련 지역안전지수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며 “교통사고와 화재, 범죄, 생활안전을 포함해 안전지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달라”고 요구했다.

표성준기자

투자, 부동산 다음 스타트업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2018_7.27(금)
17:00-20:00

문의: 창업허브팀
064-710-1932



장소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3층 Track룸

대상
스타트업 투자에 관심 있는 누구나

주제
스타트업 투자의 개념 및 엔젤클럽 활동 사례

신청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jccei.kr)에서 신청

※ 강연이 끝나고 참가자들 간 스타트업 투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네트워킹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제주식품산업학회 2018 춘계학술대회 심포지엄

(주제) 제주식품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전략

- 일시: 2018년 7월 19일(목), 12:00-18:00
- 장소: 제주대학교 이라컨벤션홀 세미나실3(구 국제교류회관)
- 주최: (사)제주식품산업학회, (사)제주바이오포럼 식품연구회
- 후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사 세부일정

시간	분	내용	발표자
7. 19. (목)			
12:00-13:00	60	등록	
개회식		사회: 오명철(제주국제대)	
13:00-13:30	30	개회사 축사 단체사진 촬영	학회장
〈심포지엄: 제주식품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전략〉			
1부		좌장: 천지연(제주대)	
13:30-14:10	40	한돈의 고부가 가치 기술 개발 방안	정종연 (경성대)
14:10-14:50	40	제주 불소라의 고부가 가치화 방안	한승철 (제주연구원)
14:50-15:30	40	글로벌 수산물가공식품산업의 동향 및 전망	이정식 (경성대)
15:30-15:40	10	휴식	
2부		좌장: 김현정(제주대)	
15:40-16:20	40	제주 천연자원의 식품소재화 연구	정용환 (생물학대응연구소)
16:20-17:00	40	제주 지하수 부존 및 수질 특성	문수형 (제주개발공사)
17:00-17:30	30	제주산 불소라 소비 확대를 위한 메뉴 적용 방안(시연회)	최영진 (제주한라대)
종합토론		좌장: 임상빈(제주대)	
17:30-18:00	30	토론	

■ 문의처: (사)제주식품산업학회 사무국
6360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광로 107
Tel. 064)730-4151, Fax 064)730-4111

(사)제주식품산업학회

제주흥사단 문화센터 『문화대학』 2기 수강생 모집

제주흥사단 문화센터는 제주도민의 문화적 인식 교양과 실사구시적 문화예술의 소양을 함양하고자 무료강좌를 개최합니다. 뛰어난 강사진과 함께 하는 최고의 흥사단문화대학에서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십시오

■ 모집부문

강좌명	요 일	시 간	강 사
캘리그래피	화	10:00-12:00	강진영
시 창작	화	13:00-15:00	김승범 허이자
편집디자인(개인책출판)	수	19:00-21:00	안중국
문화유산답사	수	15:00-17:00	고영철
하모니카	수	18:30-20:00	박 순
생활건강풍수	목	11:00-13:00	고강필
기 타 교 실	목	19:00-21:00	석해준
수채일러스트	금	10:00-12:00	김진영
중 국 어	금	10:00-12:00	김홍수
대금/가야금	요 일 시간대		신은숙

중국어, 생활건강풍수, 수채일러스트는 제주흥사단 문화센터(노형동), 대금/가야금은 문화 3센터(이도2동)에서 강의합니다.

※ 교육내용은 문화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복신청도 가능합니다 ※ 강좌명에 따라 재료비는 별도

■ 접 수

2018년 7월 24일(화)~8월 31일(금)까지 선착순

■ 수강료: 무료

■ 운영회비

3개월 6만원 / 제주은행 39-02-247501(김승범)

■ 개 강 시

2018년 9월 3일(월)부터 해당 교실별 첫 수업일

■ 접 수 처

흥사단제주문화센터 사무국 (노형동 고사마루길 106)

■ 문 의

센터장 010-4110-4936, 재무부장 010-2612-5793

제주흥사단문화센터장 김 승 범